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인쇄/1999년 2월 12일

발행/1999년 2월 2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국제관계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9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64-8

4,000원

연구보고서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 정 호

민족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950대 중반에 간접교역으로 시작한 북·일 경제교류는 1991년부터 북·중교류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을 가지는 교역관계가 되었지만, 900억원의 미결제 채무문제로 인하여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북·일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는 조·조 경제교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일 경제교류의 한계 및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일본에 조총련이라는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조 경제교류의 전개와 더불어 북한이 1984년부터 '외국자본 유치전략'으로서 합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도, 합영사업의 대부분의 투자는 조총련계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북·일 경제관계의 변천과 시기별 특징에 관하여 살펴 본 뒤, 조·조 경제관계에서의 조총련의 존재 및 역할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나아가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진출과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1. 북·일 경제관계와 조·조 경제교류

가. 제1기(1956~61년) : 간접교역의 개시

냉전체제의 긴장완화와 더불어 평화공존이 조성되는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일본의 하토야마(鳩山)정권(1954.12~57.3)은 자주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북한 또한 1955년 2월 26일에 발표된 남일 외교부장의 대일성명에서 무역, 문화관계 등의 발전을 통하여 일본과 관계개선을 도모할 의사가 있음을 최초로 공식적

으로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북·일의 접근 분위기속에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이 전개되어 1956년부터 간접교역이 시작되었다. 북·일무역은 중국의 따롄(大連)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형태로 1956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나. 제2기(1962~74년) : 직접교역으로의 전환 및 교역의 확대·발전

1961년 4월 일본 정부는 '직접 대금결제를 금지'하는 조건과 더불어 북한을 강제바터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접거래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건부 직접거래는 1962년 11월 「수출무역관리규제」조항의 일부 개정과 더불어 모든 조건이 철폐됨에 따라 본격적인 직접교역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동년 11월부터 정기 화물선이 취항하게 되었고, 이듬해 9월에는 북한무역은행과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직접결제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무역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 특히 1972년부터 74년까지 북·일교역은 급격히 확대·발전되었다.

다. 제3기(1974-83년) : 북한의 대일 채무 급증과 채무상환 연기

1974년 중반부터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후불(後拂)·연불(延拂)수출에 대한 지불을 지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증가일로에 있던 북·일교역은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즉 북한의 대일무역적자 누증과 더불어 일본 기업들의 북한 무역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고, 일본 기업들의 북한진출이 침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북·일교역의 침체상황을 타파하고 경제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북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는 「일조무역경제협의회」(日朝貿易經濟協議會)를 설립하고 1979년 8월 북한의 조선은행과 채무연기에 관한 기본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북한의 채무상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북·일교역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게다가 1983년 10월의 ‘아웅산 테러사건’ 직후 일본 정부가 약 1년간 지속된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정부 또한 연체이자의 지불을 정지시킴에 따라, 북·일 경제교류는 한층 경색되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누적된 북한의 대일 채무액은 현재 약 900억엔에 이르며, 아직까지도 미불로 되어 있다.

라. 제4기(1984년~현재) : 북·일 경제교류에서 조·조 경제교류로 전환

일본기업들이 국제적 신용을 상실한 북한에 대해 교역 및 투자를 주저함에 따라, 북·일 경제교류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조·조 경제교류로 대체되게 되었다. 즉 조총련계 상사나 기업들이 일본기업들의 참여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워감으로써 북·일교역에서 조·조무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났고, 아울러 북한의 합영사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도 재일조선인들에 의해 주도되게 되었다. 이와같은 북·일 경제교류의 변화속에서 조총련은 북한의 합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1986년에는 「조선국제합영회사」를 설립하였고, 1989년에는 합영기업에 대한 용자를 위한 「조선합영은행」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북·일간

에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교섭이 본격화되자, 북·일은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도 재개하였다. 그러나 '900억엔의 미결제 채무문제' 때문에 북·일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지만, 일본은 대북투자 및 경제교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요컨대, 일본의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북·일 경제교류의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북·일 경제교류는 조·조 경제교류로 전환되고, 북·일 경제교류는 조총련계 기업들에 의한 조·조무역, 조·조 합영사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북·일무역에서 조·조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90%로 추정되고 있다.

2. 조총련의 활동과 조·조 경제교류

국내외 환경의 변화 즉, 1980년대이후 일본 국내정치의 탈이데올로기 및 보수화(保身化) 성향의 심화,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일본의 정치·사회적 변화, 일본 국민들의 대북한 여론 악화와 그에 따른 북·일관계의 냉각 등은 조총련으로 하여금 몰락의 위기상황을 맞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총련의 쇠락은 조·조 경제교류에서 조총련의 영향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은신용조합 등 조총련계 신용조합의 파산에 따른 금융사업의 위기는 지난 40여간 조총련을 지탱해온 경제적 구심력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조직 이탈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조직 이탈과 더불어 북·일 경제교류 및 조·조 경제교류에서 조총련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조총련은 대북한 경제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성과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을 계기로 일본국내 대북한 여론이 악화되자 조총련계 상공인들은 대북 투자에 대해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조총련 고치현(高知縣) 상공회는 '북한이 계속해서 재일교포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대북한 경제지원 및 투자를 거부할 것'이라는 항의문을 조총련 본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후, 일본내 대북한 및 조총련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악화되고, 그에 따라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된 조총련계 교포들의 대북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조총련의 쇠락과 함께 조·조 경제교류는 한층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3.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진출과 조·조 합영사업

가. 북한의 투자 유치전략과 조·조 합영사업의 추진

1980년대 초반 김일성이 중국 및 동유럽 지역의 산업시찰을 하고 돌아온 후, 북한은 외자유치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개방하기 어려운 내부실정을 고려하여 경제특구 전략보다는 합영사업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즉 북한은 경제특구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과 더불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고,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

략'으로서 합영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서방 공업국가들로부터 직접 자본을 유치하려던 합영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합영사업의 대부분은 조·조무역처럼 조총련계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합영사업진출은 대체로 김일성의 '2:28 교시' 이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부터 약 3년간 조·조합영사업은 '대북한 투자 붐'을 일으키면서 매년 20여건의 양적 발전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조총련계 기업들이 합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조총련과의 조직적 관계에 따른 권유·강제·명령에 의한 것만도 아니고, 아울러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투자차원에서만도 아니었다. 사쿠라 그룹의 고 전직식(全鎭植) 전사장이 '북한과의 합영사업은 在日의 糧'이었다고 언급한 것처럼, 그 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같은 조·조 합영사업도 1992년의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북·일관계가 냉각되고 '대북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속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도산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조·조합영사업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1995년 1월 「조총련 합영사업추진위원회」는 합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사례중심으로 지적한 "합영회사 운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평양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앞으로 보냈고, 1996년 10월초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제9차 이사회에서는 '조·조 합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나.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

조·조 합영사업은 대체로 비교적 규모가 적고 자금회수가 빠르며 저급기술로 가능한 2차산업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조·조 합영사업이 조총련 기업의 자본, 기술적 우위와 북한측의 저임금 노동력, 토지 등이 결합한 상호보완적 사업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투자를 장려하는 철강, 전기, 중화학 공업 등의 기간 사업에서는 거의 합영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조·조 합영사업은 조총련계 기업의 자본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기대만큼 발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에 관한 정확한 파악은 정보량의 절대부족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북한의 '합영법'이 제정된 1984년부터 95년까지 설립된 조총련 계열의 합영회사 수(數)는 약 131개이고, 1998년 12월말 시점에 정상적으로 조업중인 합영회사는 '조선합영은행' '모란봉 합영회사' '김만유 병원' 등 15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조·조 합영사업이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거의 실패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1996년 7월 일본을 방문하였던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조 합영사업의 실패를 시인하였고, 또 이듬해 1월 25일 방일한 국제무역 촉진위원회의 김정기 부위원장은 일본기업들에게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 본격적으로 경제교류를 한 것이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아 준비나 이해가 부족하니 이점을 이해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열악한 투자환경속에서도 몇몇 합영사업은 상대적이지만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먼저 대표적인 조·조 합영회사

즉 「운산광산개발이사회」, 「국제화학합영회사. 함흥공장」,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 「모란봉 합영회사」 등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나아가 부진요인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조 합영사업의 부진 및 실패의 (1) 경제적 주요 요인으로는 원료 및 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과 그에 따른 조업중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비에 따른 취약한 생산기반, 노동자의 의욕상실 등 노동공급 및 관리의 문제점, 생산품의 취약한 대일 수출경쟁력, 경영혁신 및 기술도입에 대한 거부감 등을 지적할 수 있고, (2) 경제외적 주요 요인으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오해,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및 「우리식 합영사업」의 파행적 운영, 관료들의 부패, 행정서비스의 취약, 북한측의 신용·계약을 무시한 경제행위, 북한 비거주에 따른 한계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조 합영사업의 부진 및 실패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곧 북한 투자환경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이므로, 「북한측의 투자환경 개선방안」 마련이나 「우리기업들의 대북한 진출 전략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교훈이나 전략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북한은 자본주의적 경영에 미숙하므로, 반드시 경영권과 인사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과 주요 기술자들이 현지 상주하여야 한다. 비자조차 제때에 발급되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고려해 볼 때, 경영진과 주요 기술자들이 반드시 현지에 상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열악한 행정서비스, 계약이행의 경시 등을 고려해 볼 때, 권력적 보호막을 염두에 둔 「배후 파트너」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차원의 회사들과 합영을 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중앙차원의 공적 창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로, 철도 등 SOC시설이 미비하고, 원료·원자재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대북한 투자사업은 가능한 한 임가공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수송문제 등을 고려하여 연안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진·선봉 지구의 합영공장에는 「공장 당위원회」가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연안지역의 경제특구화와 더불어 임가공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연안개발 투자전략’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전력·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으로 조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북한 투자사업으로서 전력소모가 적은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가발전기로 전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가 적절한 것이다.

다섯째,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및 「우리식 합영사업」의 파행적 운영 때문에 「대안의 사업체계」와 합영사업이 충돌하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합영에 관한 계약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철저하게 문서화해야 할 것이다. 즉 합영법, 외국인 투자법의 내용대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시 이를 문건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준비로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합영에 관한 법규정을 철저하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북·일 경제관계 변천과 조·조 경제교류	3
1. 제1기(1956~61): 간접교역의 개시	3
2. 제2기(1962~74): 직접교역으로의 전환 및 교역의 확대·발전	5
3. 제3기(1974~83): 북한의 대일채무 급증과 채무상환 연기	8
4. 제4기(1984~현재): 북·일 경제교류에서 조·조 경제교류로 전환	10
III. 조총련의 활동과 조·조 경제교류	16
1. 조총련의 등장과 조직정비	16
2. 조총련의 활동과 조·조 경제교류의 활성화	20
가. 조총련의 '평화통일운동'과 지지기반확대	21
나. 조총련의 교육사업과 광범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22
다. 조총련의 금융사업	25
라. 조총련의 재일교포 복송사업	26
3. 조총련의 쇠락과 조·조 경제교류의 침체	30
가. 국내외 환경의 변화, 북·일관계의 냉각 등에 따른 조총 련의 위기상황	30
나. 조총련 교육사업 및 출판문화사업의 침체와 조직 중심 력의 약화	31
다. 조총련 금융사업의 침화와 상공인의 이탈	34
라. 일본국민들의 대북한 여론악화와 조총련 활동의 위축	35

IV.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진출과 조·조 합영사업	38
1. 북한의 투자 유치전략과 조·조 합영사업의 추진	38
2.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	46
가. 조·조 합영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연구	48
나. 부진 및 실패원인	51
V. 결론	58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일본 가와가즈 南海電鐵 회장과 조선아시아무역회장간의 기술제 휴·합작사업에 관한 비망록(1985. 9. 16)의 개요	11
<표 2> 북·일 무역 통계 (1961~1997)	14
<표 3> 일본의 수출구성 (96/97년)	15
<표 4> 일본의 수입구성 (96/97년)	15

그림 목 차

<그림 1> 북·일경제교류의 특수성과 그 구도	16
<그림 2> 「조선국제합영총영사」의 역할	43
<그림 3> 합영회사 설립의 경로	44
<그림 4> 아시카가 은행에서 조선합영은행으로의 송금	45

I. 서론

1950대 중반에 간접교역으로 시작한 북·일 경제관계는 일본정부의 '대공산권 교역확대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1962년에 직접교역으로 전환되면서 급격히 확대·발전되었다. 그러나 북·일 경제관계는 북한의 대일채무 급증으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특히 채무상환 문제 때문에 경제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북·일 경제관계는 국제환경 및 남북관계의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대체로 북·일 경제관계는 1986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그 규모면에서는 소련 붕괴이후 즉 1991년부터는 북·중 경제관계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을 가지는 교역관계였다. 즉 북한에게 일본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의 교역국가인 것이다.¹⁾

그런데, 이와같은 북·일 경제관계의 실체는 소위 '조·조경제교류'(조총련과 북한간의 경제교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즉 북한의 미결제 채무문제로 인하여 일본기업들의 대북한 교역 및 투자가 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북·일 경제관계의 공백은 조총련계 상공인·기업인들에 의해 메워졌던 것이다. 이는 북·일 경제관계의 특수성이며, 북·일관계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고 약칭함)이라는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자본 유치전략'으로서 합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도, 합영사업의 대부분의 투자는 조총련계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일 경제관계의 변천과 시기별 특징에 관하여 살펴본 뒤, 조·조 경제관계에서의 조총련의 존재 및 역할에 관하여

1) 「北朝鮮の現況 1998」(財團法人 ラヂオプレス), p.222.

2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분석하고, 나아가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진출과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조총련 기업의 대북한 진출 및 조·조합영사업의 실태에 관한 자료는 북한과 조총련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량이 절대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북한관련 연구기관 즉 「21世紀 政策研究所」, 「아시아 經濟研究所」, 「日本貿易振興會」, 「東아시아 貿易研究會」, 「環日本經濟研究所」 등의 북한전문가와 의 면담을 통하여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한 투자 및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²⁾.

2) 상기 연구기관의 북한 전문가를 비롯하여 도움말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II. 북·일 경제관계의 변천과 조·조 경제교류

북·일 경제교류가 조·조 경제교류로 전환까지 북·일 경제관계의 변천에 관하여 고찰한다. 즉 북·일 경제교류의 흐름을 특징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한 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1. 제1기(1956~61년) : 간접교역의 개시

1953년 3월 소련에서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국제정세는 긴장완화와 더불어 평화공존이 조성되는 분위기로 전환하게 되었다³⁾.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일본의 하토야마(鳩山)정권(1954.12-57.3)은 자주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즉 하토야마 일본총리는 북한과의 경제적관계를 개선하며 회담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북한 또한 1955년 2월 26일 발표된 남일 외교부장의 대일성명을 통하여 무역, 문화관계 등의 발전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의사가 있다고 최초로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⁴⁾. 즉 남일 외교부장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관한 경계를 표시하면서도 일본 정

3) 1956년 2월 14일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는 스탈린을 비판하고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노선을 채택하였다.

4) 북한의 남일 외교부장은 대일성명을 통하여 북한은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관계를 가지려는 일체의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용의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면서 일본정부에 대해 “무역, 문화관계 및 그밖의 조일관계의 수립,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제의하였다. “대일관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의 성명” 「조선중앙년감 1956」

부와 무역, 문화관계 및 관계정상화를 향한 북·일관계의 발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김일성도 1956년 11월 21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1957년 9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일본과의 정상적 관계수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⁵⁾.

이와 같은 북·일의 접근 분위기속에서 일본과 북한간에는 민간차원에서 경제교류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즉 1955년 10월초 베이징(北京)주재 일본종합상사 3사는 「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의 주선으로 「조선무역회사」와 회담을 가진 뒤, 동년 10월 15일 '무역협정서'를 체결하였고, 또 10월 19일에는 당시 「일소무역협회」(日蘇貿易協會)의 간부가 소련방문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국제무역추진위원회」와 '일조무역추진에 관한 의사록'을 조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5년 10월 24일 각부처의 차관회의에서 북·일간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금지조치를 취하였다. 즉, 일본정부는 차관회의에서 한·일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북한과의 무역이나 기타 교류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공식결정에 따라 일본·북한간의 교역은 직접교역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간접교역을 통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56년 3월 「일조무역회」(日朝貿易會)의 설립과 더불어 동년 6월 일본종합상사 4사는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무역회사」와 '중국 따렌(大連)경유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북·일 무역은 중국의

5) 「조선중앙년감」 1957년판 p.72 및 「조선중앙년감」 1958년판 p.36.

따렌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 형태로 1956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1957년 9월 27일 평양에서 「日朝貿易會」, 「日本國際貿易促進會」, 「日蘇貿易會」의 3단체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간에 최초의 민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개요를 살펴보면, 거래 목표액은 수출입 합계 1,200만 파운드(당시 환율로 3,600만 달러), 거래 방식은 중국 따렌 경유, 결제은행은 중국은행, 그 외 민간통상대표부의 설치, 무역관계자의 상호왕래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 양국 정부간 통상협정의 체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민간협정의 체결에 따라 일본의 상사, 제조업체, 해운회사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실업단은 1958년 4월 북한을 방문하고 구체적인 거래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1958년 5월 나가사키(長崎)의 한 백화점에서 중국국기 오성홍기(五星紅旗)가 끌어 내려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중·일간의 모든 무역이 중단되게 되고, 이에 북·일간의 무역도 중단되게 되었다. 즉 나가사키의 오성홍기(五星紅旗)사건으로 인하여 북·일무역은 1년 9개월간 공백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 후 북·일무역은 1959년 6월부터 1961년까지 홍콩을 경유하는 간접무역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2. 제2기(1962~74년) : 직접교역으로의 전환 및 교역의 확대·발전

정경분리 전략과 더불어 대공산권 교역확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던 이케다(池田)정권(1960.7-64.7)은 1960년 3월, 10월에 일본의 상사들이 북한에서 선적한 화물들을 일본으로 신고 와서 선적을 호소하자 이를 용인하였다. 즉 1961년 4월 일본 정부는 '직접 대금결제를 금지'하는 조건과 더불어 북한을 강제바타지역⁶⁾으로 지정하고 직접

거래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부 직접거래는 1962년 11월 「수출무역관리규제」 조항의 일부 개정과 더불어 모든 조건이 철폐됨에 따라 마침내 본격적인 직접교역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따라서 동년 11월에 정기 화물선이 취항하게 되었고, 이듬해 9월에는 북한무역은행과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직접결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무역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

확대되던 북·일 교역규모는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로 인하여 제동이 걸리면서 1966년부터 일본의 대북한 수출이 감소됨과 더불어 축소되기 시작하다가, 1972년부터 재차 두드러지게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일본의 대북한 수출과 무역흑자도 급증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부터 북·일교역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초 국제환경의 데탕트적 상황에 편승하여 남북한간에도 화해분위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간에는 1971년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접촉'이 이루어졌고,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렸으며, 나아가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또 일본과 중국간에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마침내 1972년 9월 29일 '중·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와같은 남북한의 화해분위기, 중·일국교정상화 등 국제환경의 데탕트적 기류를 타고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접근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북한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일본 접근을 시도하였다⁷⁾. 북·일의 우호적인 접근속에서 234명의 自民·社會黨 의원들로 구성된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이 설립되었고, 북

6) 동등한 액수의 수출이 있어야 수입을 인정하는 지역.

7) 1971년 9월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東京都 知事 및 기자단에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매우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한은 일본에게 대북한 적대정책을 버리고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한국편향정책을 남북한 등거리정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북한 수뇌부의 일본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⁸⁾.

이 시기에 북·일교역은 일본의 수출증가와 북한의 구매증대 속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북한이 1971년부터 '6개년 계획'(1971-76년)⁹⁾을 시작하면서, 기계·설비도입 등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북·일교역의 급격한 증대와 더불어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과 「일조무역회」는 1972년 1월 평양에서 북한측과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고, 북한측 '재일 통상 대표부'의 기능을 수행할 '조일수출입상사'가 동년 2월에 설립되었다. 또 '조선 국제무역촉진 위원회' 대표단이 동년 10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73년 타월제조 플랜트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융자적용을 인가했고, 나아가 1975년까지 3건의 기계 및 설비수출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융자적용을 인가했다.

요컨대 1972년부터 74년까지 북·일교역은 급격히 확대·발전되었고, 이와 더불어 북한의 대서방 교역도 확대되었다.

-
- 8)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은 1972년 9월 7일 일본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일본이 남북한에 대하여 등거리 외교를 취한다면 한·일기본조약이 폐기되기 전이라도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동아일보』 1972. 9. 8.
- 9) 1970년 11월 북한은 1970년대의 경제개발전략으로서 '6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서구로부터의 자본, 기술 및 설비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3. 제3기(1974-83년) : 북한의 대일채무 급증과 채무상환 연기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다른 공산품의 가격이 폭등한데 비하여, 북한은 주종 수출품인 비철금속류의 대폭적인 가격폭락으로 인하여 외화부족을 겪게 되었다. 더구나 이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의 물적, 기술적 토대의 견고화', '산업설비근대화' 등 사회주의 건설을 대담하게 추진하였으므로, 외환사정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 중반부터 북한이 외화부족으로 후불(後拂)·연불(延拂)수출에 대한 지불을 지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증가일로에 있던 북·일교역은 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즉 북한의 대일무역 적자 누증과 더불어 일본 기업들의 북한 무역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일본 기업들의 북한진출은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북·일 교역의 침체상황을 타파하고 경제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북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는 「일조무역경제협의회」(「日朝貿易經濟協議會」)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일조무역경제협의회」는 1979년 8월 일본·북한간의 상호이해와 무역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조선은행과 채무연기에 관한 기본합의를 보았다¹⁰⁾. 이 기본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이미 결제기한이 지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100억円 중 6할을 1979년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1980년 6월까지 지불한다.

10) 제1차 채무연기는 1976년말 약 800억엔에 달하는 채무를 둘러싸고 평양에서 일본측 대표단과 조선무역은행사이에 이루어졌고, 제2차 채무연기는 1977년 6월 재차 지불연기사태가 발생하자 1979년 8월에 이루어졌다.

11) ARCレポート, 「北朝鮮：經濟,貿易の動向と見通し」(東京, 世界經濟情報サービス, 1987)

둘째, 원리금 합계 1,200억여원은 1980년부터 89년까지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액을 지불한다.

셋째, 금리는 런던은행의 금리보다 1.25%(年率) 높게 한다.

넷째, 결제는 대일 수출대금중 일정액을 일본은행에 위탁해 年 2회 지불한다.

이상과 같은 합의 이후 1983년까지 북한의 대일 채무지불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므로, 일·북간의 교역은 재차 활기를 띠면서 전개되었다¹²⁾. 그러나 북·일교역의 재활성화와 더불어 일본측의 플랜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북한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은 계속 확대되고 누증되어 갔다. 결국 1983년 제3차 채무상환연기 합의후, 북한이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이 어렵게 되자 일본의 친북상사 및 제조업체는 일본 정부차원의 연불(延拂)허가나 수출입은행 등의 협력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대북한 교역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즉 북한의 채무상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북·일교역은 침체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1983년 10월의 '아웅산 테러사건' 직후 일본정부가 약 1년간 지속된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 또한 연체이자의 지불을 정지시킴으로써 북·일 경제교류는 한층 경색되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누적된 북한의 대일 채무액은 현재 약 900억엔에 이르며, 아직까지도 미불로 되어 있다.

12) 1982년 6월까지 금리 285억엔, 원금 115억엔이 지불되었다.

4. 제4기(1984년~현재) : 북·일 경제교류에서 조·조 경제교류로 전환

북·일 경제관계는 북한의 대일무역 대금결제의 지연과 채무상환 문제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즉 일본기업들의 대북 신뢰도 저하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이 거의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민간채널을 통하여 대일본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지만, 제대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대체로 1986년부터 북·일교역의 규모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여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추구하고, 아울러 일본 재계인사들을 초청하여 어업분야, 식량 및 의류분야, 합성고무분야, 금속 및 비철금속 채광분야, 제련소 재건 등의 철광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일본 재계 인사초청을 통한 기술제휴·합작사업 제안은 <표 1>와 같은 비방록을 통한 제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1985년 9월 북한은 조선아시아무역축진회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가와가츠(川勝傳) 南海電鐵회장에게 <표 1>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였지만, 이 제안도 미결제문제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다¹³⁾.

13) 가와가츠 회장은 이 비방록을 일본의 북한담당창구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측에 전달하였고, 동아시아무역연구회측은 1985년 11월과 1986년 11월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Tomai Motoi, "Japan's Rol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East Asian Review* Vol.III, No.4(Winter 1991) : ARCレポート, 앞의 논문 : 김도형 "일본의 대북한 경제정책," 『美蘇研究』 제7집(檀國大學校 美蘇研究所, 1994) 등 참조.

<표 1> 日本 가와가츠南海電鐵회장과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 회장간의
기술제휴·합작사업에 관한 비망록(1985. 9. 16)의 개요

협력 형태	협 력 내 용
기술 협력	①간척지의 건설, 해상매립지의 활주로·공장 건설, 해양자원 개발기술 제공 ②정어리, 명태의 대량가공기술, 근해양식기술 제공 ③남성복등 기성복 생산과 메리야스 생산을 위한 선진기술 제공 ④잡관목과 벗집을 이용한 종이생산기술설비 ⑤분사교, 연료필름 생산공장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문헌과 일부전문 설비 ⑥제철소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문헌과 일부공정설비 납입과 동부문의 기술 ⑦평양-남포간 철도근대화를 위해 현지 조사후 필요기술 일부 납입
합작	①일본측이 어선, 어구, 연료, 기술자를 보장, 북한측이 어장, 노동력, 기타자재 공급으로 북한의 동서해에서 어획한 도미, 게, 북어, 광어 등의 대일수출 합작회사 조직운영 ②일본측은 기술·설비를 보장, 조선측은 양식장, 노동력, 원료를 공급하여 다시마 양식장을 건설하고, 이를 종합가공처리하는 합작회사 조직·운영 ③연산 1만톤 능력의 토마토 주스공장 합작 ④1만톤 능력의 염연초공장 합작 ⑤기존의 기계공장을 근대화, 연마반과 공구셋트 생산공장의 합작 ⑥연산 1만톤 능력의 아연 가압 주조공장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합작 ⑦원산, 금강산에 각각 1,000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호텔건설, 관광부문의 합작
대일 발주	①남·아연 동시 제련설비 ②클로로플렌 합성고무공장설비 ③용광로 설비근대화 ④규소강판·스테인레스 강판 생산설비 ⑤컬러TV 수상관 생산공장설비

대체로 일본의 기업들은 북한과의 합작사업에 대해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몇몇 중소기업만이 참여하였다. 더구나 북한측의 대금미불 때문에 자금사정이 안좋은 기업들은 1986년 무역보험의 적용을 신청하여 320억円을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기업들이 국제적 신용을 상실한 북한에 대해 교역 및 투자를 주저함에 따라, 북·일 경제교류는 조·조 경제교류로 대체되게 되었다. 즉 조총련계 상사나 기업들이 일본기업들의 참여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워감으로써 북·일교역에서 조·조무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났고, 아울러 북한의 합영사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도 제일 조선인들에 의해 주도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북·일 경제교류의 변화속에서 조총련은 북한의 합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1986년에는 「조선국제합영회사」를 설립하였고, 1989년에는 합영기업에 대한 융자를 위한 「조선합영은행」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북·일간에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교섭이 본격화되자, 북·일은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도 재개하였다. 즉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치외교활동과 더불어 경제활동도 재개된 것이다. 따라서 북·일간에는 ‘개발수입’(開發輸入)의 추진이 논의되었다¹⁴⁾. 개발수입은 일본기업이 북한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입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본측의 투자가 수입전에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역과 투자가 일체된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교류를 위하여 1991년 4월 「동

14) 북한은 개발수입을 일본측에 강력하게 희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채무문제로 곤경에 처해있는 북한·일본 무역을 재활성화하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무역연구회」와 「일조무역회」는 공동으로 '개발수입촉진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2년 5월에는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대표단이 10년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동년 7월에는 50여명으로 구성된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이 방북하여 대북한 경제교류 및 투자환경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900억엔의 미결제 채무문제'로 인하여 북·일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북한은 일본과의 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하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지만, 일본은 대북투자 및 경제교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즉 북한은 1997년 1월 김정기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을 파견하여 일본재계 및 단체들과 대북투자촉진 및 교역확대 방안을 협의토록 하였고, 동년 2월에는 김웅렬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을 방일케 하여 경제교류 확대방안에 관해 협의토록 하였으나, 일본재계 및 기업들은 침체일로에 있는 북한과의 교류에 그다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북·일 경제교류의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북·일 경제교류는 조·조 경제교류로 전환되고, 북·일 경제교류는 조총련계 기업들에 의한 조·조무역, 조·조 합영사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6년부터 약 500-600억円 정도의 규모로 축소된 북·일교역의 규모는 1996년에는 약 56,397,342,000円, 1997년에는 약 58,165,631,000円인데, 그 내용은 <표 3> 및 <표 4>와 같으며, 그와 같은 북·일무역에서 조·조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90%로 추정되고 있다.

14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표 2> 북·일 무역 통계(1961~1997)

年 (1~12月)	일본의 수출		일본의 수입		합계		균형	
	單位1000円	單位 1000달러	單位1000円	單位 1000달러	單位1000円	單位 1000달러	單位1000円	單位 1000달러
1961年	1,777,810	4,931	1,431,259	3,976	3,209,069	8,914	346,551	962
1962年	1,721,082	4,781	1,639,250	4,553	3,360,332	9,334	81,832	228
1963年	1,925,063	5,347	3,394,893	9,430	5,319,956	14,777	-1,469,830	-4,083
1964年	4,062,106	11,284	7,283,226	20,231	11,345,332	31,515	-3,221,120	-8,947
1965年	5,941,902	16,505	5,300,900	14,723	11,242,202	31,228	641,602	1,782
1966年	1,805,810	5,016	8,169,123	22,692	9,974,933	27,708	-6,363,313	-17,676
1967年	2,293,164	6,370	10,658,020	29,606	12,951,184	35,976	-8,364,856	-23,236
1968年	7,469,185	20,748	12,251,420	34,032	19,720,605	54,780	-4,782,235	-13,284
1969年	8,403,208	24,159	11,586,920	32,186	20,284,128	56,345	-2,889,712	-8,027
1970年	8,403,798	23,344	12,389,169	34,414	20,792,967	57,758	-3,985,371	-11,070
1971年	10,025,357	28,907	10,542,791	30,059	20,568,148	58,966	517,434	-1,152
1972年	28,780,569	93,443	11,799,811	38,311	40,580,380	131,754	16,980,758	55,132
1973年	27,072,887	100,160	19,604,139	72,318	46,680,026	172,478	7,465,748	27,842
1974年	73,516,042	251,914	31,695,229	108,824	105,211,824	360,738	41,820,813	143,090
1975年	53,331,814	180,630	19,283,273	64,839	72,615,087	245,469	34,048,541	115,791
1976年	28,570,042	96,056	21,243,401	71,627	49,813,443	167,683	7,326,641	24,429
1977年	33,761,091	125,097	18,103,313	66,618	51,864,404	191,715	15,657,778	58,479
1978年	37,947,080	183,347	22,256,057	106,862	60,203,137	290,209	15,691,023	76,485
1979年	61,975,691	283,848	32,709,660	153,027	94,655,351	435,875	29,236,031	131,821
1980年	84,946,420	374,305	40,977,411	180,046	125,923,831	554,351	43,969,609	194,259
1981年	63,625,019	290,995	30,670,410	139,476	94,295,429	430,471	32,954,609	151,159
1982年	78,071,510	313,162	37,510,497	152,026	115,582,007	465,188	40,561,013	161,136
1983年	77,620,655	327,077	29,955,452	126,149	107,576,107	453,226	47,665,203	161,136
1984年	60,317,360	254,719	34,299,772	145,218	94,617,132	399,937	26,017,588	109,501
1985年	59,049,551	247,069	43,200,874	179,293	102,250,425	426,362	15,848,677	67,776
1986年	31,039,362	183,971	29,272,806	173,229	60,312,168	357,220	1,766,556	10,742
1987年	30,842,493	213,739	34,885,998	241,744	65,728,491	455,483	-4,043,505	-28,005
1988年	30,593,201	238,883	41,588,737	324,649	72,181,938	563,532	-10,995,536	-85,766
1989年	27,204,597	197,001	41,115,107	298,678	68,319,704	495,679	-13,910,510	-101,677
1990年	25,381,712	175,900	43,296,175	300,282	68,677,877	476,182	-17,914,463	-124,382
1991年	30,245,795	223,993	38,284,300	283,574	68,530,095	507,567	-8,038,505	-59,581
1992年	28,282,862	223,025	32,675,604	258,560	60,958,466	481,585	-4,392,742	-35,535
1993年	24,223,694	219,654	27,942,808	252,351	52,166,502	472,005	-3,719,114	-32,697
1994年	17,400,145	170,780	32,728,663	322,684	50,128,808	493,464	-15,328,518	-151,904
1995年	23,731,600	254,957	32,107,865	339,680	55,839,465	594,637	-8,376,265	-84,723
1996年	24,694,659	227,506	31,702,683	292,170	56,397,342	519,676	-7,008,024	-64,664
1997年	21,630,387		36,535,244		58,165,631		-14,904,857	

(大藏省通關統計)

<표 3> 일본의 수출구성(96/97년)

비율:%

년도 구성구분	1996년		1997년		
	금액 (천엔)	총액비	금액 (천엔)	총액비	전년비
섬유·제품	8,196,046	33.2	7,501,147	34.7	91.5
수송기기	2,845,413	11.5	3,931,890	18.2	138.2
전기기기	1,888,625	7.6	2,833,568	13.1	150.0
광물기기	2,908,348	11.8	1,596,258	7.4	54.9
기계류	1,785,139	7.2	1,171,986	5.4	65.7
플라스틱고무	1,066,587	4.3	854,992	4.0	80.2
귀금속·제품	1,002,602	4.1	670,861	3.1	66.9
화학제품	566,961	2.3	398,085	1.8	70.2
재수출	2,209,421	8.9	812,034	3.8	36.8
기타	2,225,517	9.1	1,859,566	8.5	
합 계	24,694,659	100.0	21,630,387	100.0	87.6

(大藏省通關統計)

<표 4> 일본의 수입구성 (96/97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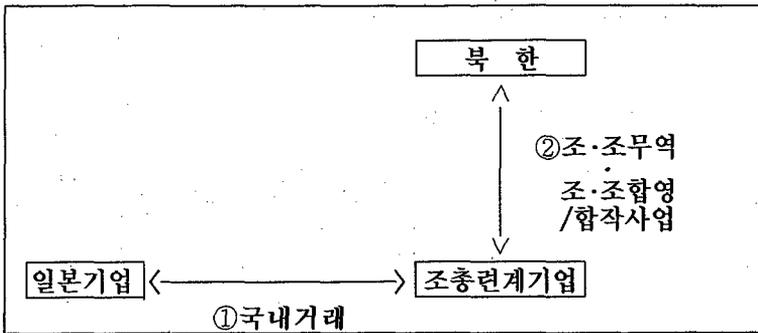
년도 구성구분	1996년		1997년		
	금액 (천엔)	총액비	금액 (천엔)	총액비	전년도
섬유·제품	13,498,148	42.6	11,534,990	31.6	85.5
식물성생산물	4,426,504	14.0	8,036,763	24.5	201.9
동물성생산물비	6,117,842	19.3	6,184,507	16.9	101.1
귀금속·제품	2,569,034	8.1	3,715,812	10.2	144.6
광물성생산물	3,353,704	10.6	3,213,214	8.8	95.8
전기기기	939,864	3.0	1,772,066	4.9	188.5
조제식료품	260,659	0.8	336,429	0.9	129.1
목재·제품	72,263	0.2	228,704	0.6	316.5
화학제품	54,713	0.2	163,642	0.4	299.1
기타	409,952	1.2	449,117	1.2	
합 계	31,702,683	100.0	36,535,224	100.0	115.2

(大藏省通關統計)

III. 조총련의 활동과 조·조 경제교류

최근의 북·일 경제관계는 일본의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무역규모의 감소 등으로 조·조 경제교류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북·일 경제관계의 한계성인 동시에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국교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의 북·일관계가 그와 같은 경제적 특징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일관계에 조총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일경제관계 및 조·조경제관계에서 조총련은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그림 1> 북·일 경제교류의 특수성과 그 구조



1. 조총련의 등장과 조직정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재일교포들은 해방된 민족으로 처우받고 회복된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내 각지에서 약 300여개의 한인자치단체를 결성했고, 나아가 1945년 10월 15일에는 전국적인 규모

의 통합단체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이라고 칭함)을 결성하였다.

「조련」은 좌우세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로 출발하였지만,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이 세력확대를 위하여 공작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이념 갈등에 따른 조직적 분열¹⁵⁾을 거치면서 좌경화되었다.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에서 좌익단체로 변모한 「조련」은 폭력적인 극좌노선을 추구하다가 1949년 9월 8일 강제해산을 당하였다.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은 「조련」의 해산으로 활동기반을 상실하게 되자 「조국방위위원회」(1950.6.30)와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1951.1.9)을 조직하였고, 일본공산당의 지도에서 북한노동당의 지도로 노선을 전환시키면서 「조총련」(1955.5.5)을 결성하였다. 즉 1955년 5월에 조총련은 「조련」의 좌경화, 「조국방위위원회」 및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의 발전적 해체 등의 과정 즉 「조련」→「조국방위위원회」 및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조총련」이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생성된 것이다.

「조총련」의 결성배경 및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국제환경 및 일본 국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 보면, ①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하여 평화공존노선을 주창함에 따라 국제환경은 동서냉전적 상황으로 부터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고, ② 1954년 1월 일본국내에서는 친미적인 ‘요시다 정권’이 물러나고 ‘하토야마 정권’이 등장하면서 대외정책이 대미의존정책으로부터 자주노선

15) 일본 공산당의 「朝聯」의 주도권 장악에 반발한 民族系 청년들은 1945년 11월 16일 「朝鮮建國促進青年同盟」을 결성하고 1946년 1월 2일 정치단체인 「新朝鮮建設同盟」을 조직한 후 「朝聯」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朝聯」이 좌경화되자 이에 대항하여 보수적인 민족세력은 「新朝鮮建設同盟」을 주축으로 하여 1946년 10월 3일 「在日本朝鮮居留民團」을 결성하였다. 「在日本朝鮮居留民團」은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으로改稱되었다.

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와같은 환경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대일본정책을 유화·접근정책으로 전환토록 하였다¹⁶⁾.

둘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의 내부에서는 일본 공산당의 극좌 노선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일본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는데, 북한의 대일본 유화적 접근은 그와 같은 ‘민족주의’파가 「재일조선민주전선」 및 재일한인 사회에서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는데 지원세력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의 지도노선이 일본 공산당에서 북한 노동당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조총련」이 결성되었는데, 북한과 ‘민족주의’파의 주도아래 「조총련」이 출범하였다는 것은 해방후 재일 韓人사회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기본적으로 규제해 왔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대원칙인 “일국일당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일 한인좌파세력들은 해방후 일본 공산

16) 북한의 南日외무상은 1954년 8월 30일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들에게 대한 일본 정부의 비법적 박해를 반대 항의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재일 조선인의 정당한 권리를 정부정책차원에서 보호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어 남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5년 2월 25일 대일 관계에 관한 성명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즉 북한 정부는 남일외무상의 성명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재생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면서도 일본 정부와 무역, 문화관계 및 관계정상화를 향한 북한-일본 관계의 발전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의사 표시한 것이다. 「조선중앙년감 1956」, p.16. “---조선 인민은 과거에 조선을 강점하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를 제패하려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현재에도 일본을 재무장하여 일본에 군국주의를 재생시킴으로써 일본을 아세아 침략의 책원지로 전변시키며 일본 인민을 새로운 군사적 모험에 리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일체 국가들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선 호상 리익에 부합되는 무역관계와 문화적 관계를 설정할 것을 희망하여 왔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 수상 하토야마씨의 우리 공화국과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며 화답할 용의를 표명한 최근 발언을 긍정적으로 대하며 따라서 일본 정부와 무역, 문화 관계 및 기타 조일관계 수립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당과 10년간에 걸쳐 형성된 인적·조직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끝으로, 한국정부의 대일본정책 및 재일교포정책이 부재하였던 시기에 북한은 대일본 유화적 접근 및 재일교포 포용정책을 전개하였는데, 그와 같은 북한의 정책은 재일교포사회의 좌경화를 가속화하였고 아울러 일본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증대시켰다. 실제로 일본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은 「조총련」의 조직적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해외전위조직을 확보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성의 의의를 지닌 조총련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노선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하였고¹⁷⁾, 따라서 東京에 있는 중앙본부가 지방조직을 통괄하는 형태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즉 중앙조직은 중앙대회(전체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로 구성되었고, 지방조직은 일본의 행정구역에 준해서 都·道·府·縣 본부 49개소, 지부 320개소, 분회 2,000개소와 7개 지방협의회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조총련은 계층별, 세대별, 직업별, 성별 활동과 여론주도를 위한 선전·홍보활동을 위하여 산하에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 재일조선인신용조합협회 등 여러단체들을 두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7) 조총련의 모든 업무 및 운영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에 의하여 주관되었다. 말하자면, 조총련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인 한덕수의 지휘아래 한덕수계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8,500명의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조총련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1957년 3월 결성된 '학습조'는 비밀조직으로서 '김일성주의'를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신봉하고 '조국혁명=조국통일'을 위해 몸을 바치는 핵심적인 '혁명투사'조직이다. '학습조'는 북한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하였다.

<주요 산하단체>

재일조선청년동맹,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재일조선인교육회, 재일조선인교직원동맹, 재일조선인과학자협회,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조선언론출판인협회, 재일조선유학생동맹, 재일조선인상공연협회, 재일조선인신용조합협회, 재일조선인체육연합회, 재일조선인불교도연맹, 재일조선인통일동지회.

<주요 사업단체>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구월서방, 학우서방, 조선문제연구소, 조선화보사, 시대사, 조선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재일조선인통신교육협회, 재일수출입상사,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선청년사, 조총련중앙학원.

2. 조총련의 활동과 조·조 경제교류의 활성화

조총련은 1957년에 중앙집권적 체제로서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재일교포의 민족적 대중단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북·일관계와 관련하여 '북한 노동당의 일본지부', '주일 북한대표부' '북한의 재외경제부'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조총련은 '평화통일운동'의 적극적 추진, 민족교육사업 및 금융사업의 전개, 재일교포 복송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나아가 조직 및 재정적 기반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이와 같은 조총련의 세확대 및 발전은 900억원의 미결제 채무문제로 인하여 북·일무역이 침체되자 「재일조선인상공연협회」 등을 통하여 조·조무역으로 그 공백을 매우도록 하였고, 아울러 조·조 합영사업의 참가 등을 통한 대북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따라서 조총련의 쇠퇴는 조·조 경제교류의 침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가. 조총련의 ‘평화통일운동’과 지지기반의 확대

한반도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이승만정부는 무력복진통일을 주창하였고, 이에 비하여 한국전쟁을 도발하였던 북한은 ‘남한의 복침’을 강조하면서 자기합리화를 위한 평화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즉 북한은 국제사회에 ‘남한은 가해자’이고 ‘북한은 피해자’라는 선전을 펼치면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조총련을 비롯한 좌익세력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남한의 복침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승만정부의 ‘무력복진통일’에 맞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제도적 정치권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평화주의 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¹⁸⁾, 그와 같은 일본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편승한 북한의 ‘평화통일론’은 일본사회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는 이승만정부의 철저한 반일정책노선이 기여한 점도 있다. 이승만정부는 반일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들을 나포하고 억류하였는데, 일본국민들은 그와 같은 이승만정부를 호전적으로 보게 되었고 따라서 이승만정부의 ‘복진무력통일론’보다 북한의 ‘평화통일론’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사회의 반응은 재일교포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18) 당시 일본사회의 정치사상적 분위기를 보면, 사회당을 비롯한 혁신정치세력들은 ‘헌법개정반대, 평화헌법수호’, ‘미일안보조약반대’, ‘비동맹 중립주의’, ‘재군비 반대’ 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일본사회에서 평화주의노선으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고,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론’에 동조하게 되었다. 대체로 재일교포사회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었으므로 무력통일에 대해서는 反통일정책으로 간주하고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¹⁹⁾.

요컨대 북한과 조총련은 ‘평화통일운동’의 전개를 통하여 재일교포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평화에호적이며 민족주의적’이라는 이미지의 구축과 더불어 지지기반을 확대시켰다. 이는 조총련이 ‘주일 북한대표부’, ‘북한의 재외경제부’ 등의 역할수행을 위한 지지기반의 확대이기도 하다.

나. 조총련의 교육사업과 광범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유교적 영향으로 재일교포들의 교육열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해방후 재일교포들은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조련」이 결성된 후 「국어강습소」를 설립하여 초등교육전반에 걸친 수업을 실시하다가 이를 통합 東京 「조선인 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재일교포들의 교육열은 재일교포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교포사회에서 조직의 확대 및 영향력의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의식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대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조총련의 결성과 더불어 재일교포 교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의 이승만 정부가

19)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재일교포사회는 북한의 평화통일론과 이승만정부의 북진무력통일론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의 차원이 아닌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반통일이냐’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였고 민족평화통일론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재일교포의 민족교육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조총련을 통하여 재일교포의 교육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즉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했던 1957년 4월에 북한은 1억 2,100만엔(61만5천5백80달러)의 교육자금을 조총련에게 지원하였다²⁰⁾. 그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매년 ‘신년축하’ ‘김일성생일’ ‘북한정권 수립일’(9월 9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등에 학교운영비 및 장학금의 명목으로 조총련의 교육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북한은 교육지원자금과 병행해서 교육활동가에게 훈장, 메달, 공훈교원, 인민교원 등의 명예칭호를 부여하고 아울러 박사, 교수, 준박사, 부교수의 학위·학직까지 수여하면서 조총련의 교육사업을 지원하였다.

조총련은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전역에 유치원부터 고급학교까지 설립하고 대학까지 세웠다²¹⁾. 그리고 북한의 교육노선에 입각하여 한편에서는 재일교포들에 대한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주의의사상 교육을 시켰다. 조총련의 공산주의사상 교육은 1958년 8월경부터 ‘재일교포 북송운동’이 추진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²²⁾.

이처럼 일본의 여러 지역에 유치원부터 고급학교까지 설립하고 대학까지 세웠다는 것은 조총련의 커다란 업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북

20) 1957년 한국정부는 재일교포를 위한 교육지원 자금으로 2만2천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1/28에 지나지 않는다.

21) 현재 조총련은 일본의 47개 都道府縣가운데 27개 지역에 67개의 유치원, 83개의 초급학교, 56개의 중급학교, 12개의 고급학교, 1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외교포조직이 세운 유일한 대학인 朝鮮大學은 1956년 4월에 2년제 대학으로 설립되었는데, 북한의 재정적 지원아래 1958년 3월부터 4년제 대학으로 성장하였고 1968년 4월에는 사회당출신의 美濃部 東京都지사로부터 ‘各種學校’로 인가를 받았다. 조선대학의 인가를 전후하여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총련의 각급학교들도 속속 인가를 받았다.

22) 李瑜煥, 「在日韓國人 60萬」(東京: 洋洋社, 1971) pp. 225-228.

한지지의 입장에서 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태생의 韓人 2세, 3세들을 위하여 한글교육과 역사,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조총련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하는 업적이다²³⁾. 그러므로 조총련계 한인들 뿐만 아니라 민단계 한인들의 자녀들도 적지 않게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다녔다²⁴⁾.

그러므로 조총련은 재일한인들의 결집의 장(場)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는 민족학교를 조직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즉 민족학교 졸업생들로 하여금 광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케 하여 세력확대를 도모하였던 것이다²⁵⁾. 졸업생들의 사상적 성향을 보면, 조총련계 교포출신 졸업생들은 대체로 일본자본주의 체제의 틀내에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를 나타내었고, 민단계 교포출신 졸업생들은 일본계학교 졸업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막대한 교육자금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총련의 교육사업은 조총련의 조직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총련이 ‘주일 북한대표부’ 또는 ‘북한의 재외경제부’로서 북·일 경제교류를 대체하는 조·조 경제교류에 재일교포 기업가들을 참가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데 사상적 차원 및 인적 네트워크 차원에서 기여하였다.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조총련계 기업들의 초기 대북진출은 경제적 차원보다는 사상적 차원에서 애국사업의 일환으

23) 재일한인 좌익계 세력과 조총련계의 교육사업은 북한에 이용당하는 면도 있었지만 민단계가 할 수 없었던 업적을 남겼다. 허동찬 “조총련 교육”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24) 재일교포사회에서는 “머느리는 우리글과 우리풍습을 아는 조총련계 출신을 맞이하는 것이 낫다”는 여담도 있다.

25) 지금까지 조선대학 졸업생이 1만명이다. 재일교포가 70만명이므로 교포 70명 중 1명이 조선대학 졸업생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졸업생들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는 재일교포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조선대학 졸업생은 조총련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로 추진되었다.

다. 조총련의 금융사업

재일 한인들은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특히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재일 한인들은 토목공사장의 인부, 구두·고무타이어·냄비 등의 수리공으로 일하거나 영세한 ‘곱창구이집,’ ‘국수·수제비집,’ 판매업 등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활을 영위하였다. 日本 법무성(法務省) 출입국관리국이 편찬한 「출입국관리와 그 실태」(「出入國管理とその實態」, 1959年版)을 보면, 약 60여만명의 재일교포 가운데 무직자가 45만 9천여명정도이다.

또 ‘맨주먹’으로 상공업을 시작한 재일교포들은 일본정부의 규제, 차별에 의한 어려움은 물론,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무척 고생을 하여야 했다. 일본은행들은 일본기업들도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재일교포들은 귀국해버리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따라서 재일교포들은 민족적 차별을 극복하고 상공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민족금융기관의 설립운동을 전개했다. 마침내 일본당국은 「민단」계와 「조련」계 공동운동을 조건으로 「동화신용조합」(「同和信用組合」)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1952년 6월 20일 「동화신용조합」이 운영되면서 神戸, 川崎, 名古屋, 京都, 大阪 등 8군데에 민족금융조합이 설립되었고, 1955년에는 10군데, 1962년에는 19군데가 세워졌다.

그런데 「동화신용조합은」 「민단」계와 「조총련」계간의 갈등으로 내분을 겪다가 1961년 5월 제 9차총회에서 조총련이 가맹하게 됨에 따

라 조총련계 기관으로서 발전을 하게 되었고, 명칭도 「조은 동경신용조합」(「朝銀 東京信用組合」)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총련의 금융사업은 「조은신용조합」을 일본 각지에 지점을 설치 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조총련은 북한으로부터 매년 송금되어 오는 교육사업 지원금 및 장학금을 「조은신용조합」에 예치토록 함으로써 조총련계 금융조합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조선신용조합」은 조총련의 결성당시에는 8군데의 신용조합, 14개의 점포, 8억 8천만엔의 예금액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 6월경에 이르러서는 38군데의 신용조합, 176개의 점포, 2조 375억엔의 예금액 규모로 성장하였다.

조총련계 교포 뿐만 아니라 민단계 교포들도 조총련계 금융조합을 이용하였으므로, 조총련계 금융조합은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민족차별과 불리한 대부조건에 고생하던 재일 한인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현재 약 2만 2천여명의 조총련계 상공인이 빠청꼬, 부동산업, 불고기집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3백억~4백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조은신용조합」을 비롯한 조총련계의 금융조합은 이들의 사업이 성장하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조총련이 금융사업을 통하여 재일 한인 상공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므로, <그림 1>과 같은 구도의 조·조 경제교류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라. 조총련의 ‘재일교포 복송사업’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일본정부에게 ‘재일교포들의 복송’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조총련도 1958년 8월 12일 東京에서 열린 8·15해방 13주년 기념대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선전요청문을 통하여

공식적 차원에서 주장하였다²⁶⁾. 나아가 동년 9월 8일 김일성은 북한 정권 창건 10주년 기념대회에서 “무권리와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최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돌아 오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가 조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보증해 줄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민족적 의무로 생각한다.”고 연설하면서 조총련의 ‘재일한인 복송운동’을 격려했다. 또 同年 9월 16일 북한의 남일 외교부장은 “최근, 재일조선공민은 자기들의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귀국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염원을 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공화국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선공민들은 실업과 무권리에 의하여 극도로 비참한 생활속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수많은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향유치 못하고 있으며, 진학과 졸업후의 생활 안정을 보장 못받고 있다. ---- 우리들은 재일조선공민의 귀국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에 귀국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조선공민을 우리측에 인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것을 일본정부에게 요구한다”며 한층 박차를 가했다²⁷⁾.

이와 같은 북한측의 요구에 응하여 일본정부는 1959년 2월 13일 각료회의에서 희망하는 재일한인들에 한하여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간에는 1959년 4월 13일부터 제네바에서 17차에 걸친 교섭회의를 하게 되고, 마침내 1959년 8월 13일 인도의 캘커타에서 일본 적십자대표와 북한 적십자대표간에 재일교포

26) 조총련은 8·15해방 13주년 기념 東京대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하여 “재일본 조선인의 북조선귀국을 보장하여 조속히 그것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요망한다”고 공식적 차원에서 주장하였다.

27) 이승목, “조총련이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총련의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 : 국토통일원, 1978) pp.59-60.

들의 북송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²⁸⁾. 재일교포들의 북송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조총련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일본정부의 보조아래 추진되었다. 1959년 12월 14일 제 1차 재일교포의 북송이 실시된 이래, 1967년 11월 12일 북송협정이 폐기될 때까지 155차례에 걸쳐 총 88,611명의 교포들이 니이카타(新潟)항구를 통하여 북한으로 보내졌다.

이러한 ‘재일한인들의 북송사업’은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만²⁹⁾, 조총련계 한인사회에서 ‘재일한인들의 북송사업’은 일본에서 민족적 차별속에 서럽게 살고 있는 재일한인들을 구출해주는 민족주의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재일한인들이 155차례에 걸쳐 88,611명이나 북한으로 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총련계 한인들은 조총련의 북송사업을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조총련의 북송사업이 그렇게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교포들의 호응을 받으며 전개된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재일한인 1세·2세대들은 일본에 정착하기보다는 조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사회에서는 재일한인들을 한반도로 돌려보내라는 여론이 있었다.

둘째,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회가 아니었고 더욱이 당시의 재일한인들은 일

28) 「朝總聯」(서울: 중앙정보부, 1975) p.113.

29) 재일교포의 북송사업에 관련된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당시 북한은 극심한 노동력의 부족을 겪고 있었으므로 노동 공급전략의 일환으로 북송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북한은 동포에 차원에서 북송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아래 재일교포사회에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재일교포사회 전체를 적화시킨다. 셋째, 한국이 재일교포의 북송반대를 반대할 경우, 이를 한국과 일본을 이간시키는데 이용한다. 넷째,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일외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본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취직도 못하고 어려운 생활로 인하여 장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셋째, 재일한인들은 소박한 민족감정에서 남의 나라 일본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조국의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넷째, 당시의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한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³⁰⁾.

다섯째, 재일한인들은 북한의 사정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었으므로 조총련과 일본의 혁신계 지식인들의 대대적인 ‘지상낙원론’ 선전에 현혹되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막대한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은 재일한인들이 그와같은 환상을 갖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조총련에 의한 북송사업은 1966년 8월 북송협정의 폐기와 더불어 일시 중지되었지만, 1971년 2월 북송재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계속 추진되었다³¹⁾.

이와 같이 재일한인들의 호응속에 전개된 조총련의 북송사업은 북송교포들의 재산기증 등으로 조총련의 재정기반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³²⁾. 북송된 재일교포들은 북·일교류의 매개역할도 하였지만, 조·조 경제교류를 위한 ‘불모’역할도 하였다. 조총련계 상공인들이 애국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대북투자를 한 이면에는 북송교포들이 인질

30) 조총련에 의한 북송사업이 시작된 4개월후 한국에서는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정권이 붕괴하고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정국은 매우 불안정하였다. 게다가 ‘보리고개’ 등 경제적으로는 절대빈곤상태에 있었다.

31) 1996년 현재 북송교포는 93,33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32) 조총련은 북송한인들에게 ① ‘지상낙원’ 북한에 가면 모든 생활을 나라에서 보장해 준다고 선전하였고, 나아가 ② 조총련에 돈이나 집 등 재산을 기부하였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북한에서 반대급부로 우대를 받는다는 선전을 하였다 즉 북한은 북송한인들의 재산기부를 유도하는 선전공세를 펼친 것이다. 그 결과 북송한인들의 상당한 재산이 조총련에 기증되었다.

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면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서 나타난 바 같이, 조총련은 민족교육사업, 금융사업, 재일교포 복송사업 등을 계기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그와 같은 조직의 발전은 조총련이 '주일 북한대표부' '북한의 재외경제부' 등의 역할수행을 위한 기반으로도 활용되었다. 요컨대 북·일 경제관계의 특수성 즉 조·조 경제교류는 조총련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지도 모른다.

3. 조총련의 쇠락과 조·조 경제교류의 침체

가. 국내의 환경의 변화, 북·일관계의 냉각 등에 따른 조총련의 위기상황

국내의 환경의 변화 즉 1980년대이후 일본 국내정치의 탈이데올로기 및 보신화(保身化)성향의 심화,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일본의 정치·사회적 변화, 일본 국민들의 대북한 여론 악화화 그에 따른 북·일관계의 냉각 등은 조총련으로 하여금 몰락의 위기상황을 맞이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1980년대 후반이후의 국제환경에 관해서 살펴보면, 1989년의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이라는 대지가 변동과 뒤이은 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미·소를 양측으로 형성되었던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전환기적 변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국제질서의 전환기적 변동속에서 일본의 국내정치는 전후 일본정치의 틀 즉 '보수 대 혁신' 구도를 기반으로 하였던 55년체제가 붕괴되는 대지가 변

등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사회당을 비롯한 혁신계 정당들의 지지기반이 침화되는 가운데 '보수와 혁신' 세력의 연립정권까지 등장하게 되는 정치적 진통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영향으로 조총련계 조직은 '공동화(空洞化) 경향' 즉 조총련계 재일교포 3·4세들이 혁신이데올로기나 민족의식으로 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기반이 침화되는 상태에 있고, 게다가 곧 구체적으로 언급할 조총련의 교육사업 및 금융사업의 침체, 일본국민들의 대북한 여론 악화 등으로 인하여 몰락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³³⁾. 즉 북·일 경제교류에서 조총련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 조총련 교육사업 및 출판문화사업의 침체와 조직 구심력의 약화

일본의 일반 학교들과는 달리 북한으로 부터 막대한 교육지원금을 원조받는 조총련계 학교는 한글공부 등 민족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및 조총련에 충성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사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총련계 학교에서는 교실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비치되어 있고, 각종행사 때에

33) 재일한인사회의 국적상황을 살펴보면, 조총련의 출범당시에는 韓國籍 25%, 朝鮮籍 75%였는데, 한일국교정상화가 된지 4년후인 1969년에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1992년에 이르러 韓國籍 78%, 朝鮮籍 22%로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 朝鮮籍의 재일한인들은 일본국적으로 귀화하거나 韓國籍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1900년대 이후 조총련계 한인들의 한국적 취득자는 3만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1997년 한해만도 5,765명이 조총련을 이탈하여 한국적을 취득했다. 조총련계 한인수는 1994년에 약 247,000명였는데, 1997년에는 198,000명정도이다. 朝鮮籍의 감소, 즉 조총련계 한인들의 이탈은 조총련의 응집력이 그 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조총련계 한인사회는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하며, 조직이 몰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는 김일성 및 김정일의 찬가가 제창되며 주체사상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그런데 조총련의 주체사상교육은 북한 및 조총련의 쇠락과 더불어 재일한인사회가 1세에서 2·3·4세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재일한인 1세들이 가슴속에 늘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3·4세들은 일본사회에 정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재일한인 2·3·4세들이 일본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치사상교육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총련계 학교는 재일한인 3·4세들이 조총련계 학교의 개인승배교육에 거부반응을 나타내면서 입학자의 매년 감소와 더불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때 약 46,000에 달했던 학생수는 현재 16,000명 정도에 불과하며,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는 몇군데 안 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조총련계 학교의 재정적 고충은 조총련의 교육사업의 한계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³⁴⁾.

이상과 같은 교육사업의 갈등, 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총련은 ① 1992년부터 교과과정과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착

34) 조총련 교육사업의 갈등 및 한계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총련계 민족학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 1조에 정해져 있는 정규학교 즉 ‘1條校’가 아니고, 학교교육법 제 83조에 정해져 있는 ‘各種學校’로認可받았다. 따라서 조총련계 민족학교 출신은 졸업후 檢定試驗을 통해서 學歷檢定을 받아야 했다. 이는 조총련이 일본 文部省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직원 채용, 교과서검정, 교과과정편성 등에 있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였다. 둘째, 재일한인 3·4세들은 대체로 일본형 자본주의사회에 적응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념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정주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자본주의사회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는 재일한인 3·4세들은 조총련계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조총련계 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북한으로부터의 교육지원금의 대폭 감소는 조총련계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수하였고³⁵⁾, 아울러 ② 일본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의 공적 원조를 받기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총련의 교육사업은 여전히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교육사업의 침체와 더불어 조총련 출판문화사업도 한계에 부딪치기 시작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2·3·4세 교포들은 대체로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세습과 개인우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권력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아울러 김일성·김정일의 개인숭배에 치중하고 있는 조총련계 기관지들에 대해서도 외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총련계 2·3·4세 교포들의 조총련계 기관지에 대한 관심이 저하됨에 따라 「조선신보」, 「조선화보」 등의 판매부수 및 구독부수는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요컨대 조총련의 출판문화사업은 경영난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³⁶⁾.

조총련은 이와같은 출판문화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젊은 3·4세 한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1996년 4월 2일부터 「조선신보」의 내용중에서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생활, 문화, 오락, 취미 등에 관한 기사를 확대하였다. 또 1996년 3월 5일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의 결정에 따라 종래의 북한선전위주의 「조선화보」를 폐간하고 1996년 7월부터 새로운 잡지 「이어」(일본어)³⁷⁾를 발행하였다. 「이

35) 조선대학의 경우는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하여 1999년도 4월 신학기부터 「정보처리학과」, 「법률학과」를 신설·운영하게 되었다.

36) 예컨대 「조선신보」는 월 2,060원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구독하는 독자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발행부수를 1995년에 3만 2,000부로 격감시켜야 했다(1990년에는 60만부). 현재 「조선신보」는 연간 4억7천만 이상의 적자때문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또 「朝鮮叢報」 역시 구독부수의 감소에 따라 광고수입이 줄어 들면서 경영난에 시달려야 했고 따라서 1995년에는 발행부수를 1만 2,000부로 대폭 감소시켜야 했다.

어」는 조총련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재일교포들의 생활상을 비롯하여 법률, 문화, 스포츠, 취미, 오락 등을 양질의 칼라화보에 담고 있고, 광고도 조총련계 기업이나 상품 뿐만 아니라 '全日空', '코카콜라' 등의 선전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총련계 기관지의 대중교양·정보지를 지향한 편집혁신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총련의 출판문화사업은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총련의 교육사업 및 출판문화사업의 침체는 조총련의 구심력을 약화시켜 젊은 3·4 세대교포들의 조직이탈을 초래하였고, 이는 조총련계 상공인들을 비롯한 교포사회에 대한 조총련의 영향력 약화로 귀결되었다.

다. 조총련계 금융사업의 침화와 상공인의 이탈

조총련은 일본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조은신용조합」을 통하여 금융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아울러 「조은신용조합」을 김정일 정권과 조총련의 자금기반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조총련이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조은신용조합」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경영함에 따라³⁷⁾, 「조은신용조합」은 일본의 버블경제의

37) 조총련은 1996년 3월 16일 100만圓의 상금을 내걸고 새로운 잡지의 題號를 현상공모하였다. 공모 마감 결과 「이어」, 「바람」, 「날개」, 「한길」, 「메아리」, 「8·15」 등 2,206건이 접수되었다. 그중에서 조총련사회가 일본사회내에서 계속 발전하여 이어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순수한글인 「이어」가 채택되었다.

38) 朝銀信用組合은 제일한인 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줄 때, 가장 우선시하는 심사기준은 조총련과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사업성보다도 현금액수와 조총련에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더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대출금의 20% 까지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례금의 절반은 조총련의 조직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북한에 송금하였다고 한다.

붕괴와 더불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조총련의 금융사업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일본경제가 ‘거품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자 조총련의 「조은신용조합」의 정치적 경영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1997년 5월 「조은신용조합」의 본거지인 「오사카(大阪) 조은신용조합」의 파산과 더불어 교토, 나라, 효고 등 관서(關西)지역의 5개 조총련계 신용조합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합병되었다. 앞으로도 관동(關東), 큐슈(九州)지역에서 몇 개 더 파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은신용조합」과 조총련계 신용조합의 파산에 따른 조총련의 금융사업의 위기는 지난 40여간 조총련을 지탱해온 경제적 구심력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조직 이탈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조직이탈과 더불어 북·일 경제교류 및 조·조 경제교류에서 조총련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³⁹⁾.

라. 일본국민들의 대북한 여론 악화와 조총련 활동의 위축

북·일접근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북·일은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즉 일본은 ‘전후처리’ 외교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고자 하였고, 북한 또한 생존전략차원에서 일본과의 국교

39) 조총련은 재정적 기반의 붕괴에 따른 조직기반의 침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2-23일 東京에서 개최된 제18차 전체대회에서 신·구세대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특히 제일한인 3·4세 상공인들의 조직 이탈에 대비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경제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수립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따라서 북·일간에는 1991년 1월에서 92년 11월까지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회담을 여덟차례나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에 접어들어 북·일관계는 ①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② 각성제 밀수사건 ③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1호의 동해안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인하여 일본이 대북한 정책의 전개에 한층 신중을 기함에 따라 정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채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북한은 北京 ‘심의관급 회담’(1997.8.21~22)을 개최하여 ‘대북 식량지원 문제’ 및 ‘각성제 밀수의혹사건’에 대한 기본 타결원칙의 마련,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의 실현 등의 성과를 올리고, 나아가 일본의 연립 3당 대표단을 방북(1997.11.11~14)시켜 국교정상화를 위한 환경조성작업을 추진하였지만, 북·일관계는 1998년에 들어와서 더욱 악화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즉 북·일관계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해명과 북송 일본인 처의 방일’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 국민들의 여론 악화와 더불어 한층 경색되기 시작했고, 특히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을 계기로 최악으로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⁴⁰⁾.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이후 일본 정부는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고, 야마가타(山形)縣과 가가와(香川)縣의 의회는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우익단체들은 북한과 조총련에 대한 비방과 항의 활동을 전개

40) 오부치 일본총리는 동년 9월 7일 한국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사태”라고 강조하였고, 노나카 관방장관은 同日 정례 기자회견에서 “실사 인공위성을 쏘았다고 해도 이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물체(로켓)에 위성이 달려 있었는가, 탄두가 달려 있었는가의 차이일뿐”이라며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였다⁴¹⁾.

최근의 이와 같은 일본 국내의 북한 및 조총련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조총련은 1998년 9월 5일 東京에서 「日·朝문제 긴급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일본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구실로 북한·조총련에 대해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동년 9월 16일에는 김태희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일본의 대북제재조치의 철회, 일본 언론계의 '인공위성 발사' 인정과 공정한 보도, 일본 당국의 조총련에 대한 폭행단속 등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총련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대북한 비난여론은 조총련에게로 연장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일본내의 비판적인 대북한 인식은 조총련의 활동 및 영향력을 상당히 위축·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은 북한의 경제난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조총련계 기업인들에게 조·조 경제교류 및 대북 합영투자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내 대북한 여론의 악화와 더불어 조총련계 상공인들은 대북 투자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조총련 고치(高知)縣 상공회는 '북한이 계속해서 재일교포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대북한 경제지원 및 투자를 거부할 것'이라는 항의문을 조총련 본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후, 일본내 대북한 및 조총련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악화되고 그에 따라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된 조총련계 교포들의 대북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조·조 경제교류는 한층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41)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총련계 학교들은 교내 수돗물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는 협박전화에 시달렸고, 게다가 치마·저고리 등 한복을 착용한 학생들은 등하교시에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IV.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진출과 조·조 합영사업

1. 북한의 투자 유치전략과 조·조 합영사업의 추진

앞절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1974년 중반부터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북한간의 무역은 침체상태에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대외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일성은 1979년, 80년의 「신년사」에서 대외무역의 다양화, 다각화를 역설하면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1980년대 초반에 중국과 동유럽 지역의 산업시찰을 단행하였다. 예컨대, 김일성은 1980년 5월에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 82년 9월에 중국, 84년 5-7월에 舊소련·폴란드·동독·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유고슬라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를 방문하였다. 이 방문에서 김일성은 중국 및 동유럽 지역의 공장들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고, 북한의 외자유치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은 외국자본 유치전략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원산, 남포 등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이전 및 경영 노하우의 도입 등을 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개방하기 어려운 내부실정을 고려하여 경제특구 전략보다는 합영사업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⁴²⁾. 이는 경제특구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따라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2) 申志鎬, “北朝鮮の經濟開放—合弁事業から經濟特區へ”, 『法學研究論叢』 第38號(東京: 慶應義塾大學, 1998)

따라서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고,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으로서 합영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합영법」은 기본적 사항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세칙에서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매우 부실한 상태였고,⁴³⁾ 재일 교포들은 합영사업에 대해 거의 경험이 없어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일본 등 서방 공업국들은 자본투자에 관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즉 서방 공업국가들로부터 직접 자본을 유치하려던 합영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합영사업의 대부분은 북한의 무역처럼 조총련계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총련계 기업들은 합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애국공장' 형태로 북한에 투자하였다. 애국공장 형태의 투자는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 '조국에 대한 충성' 차원에서 이루는 것이었다⁴⁴⁾. 따라서 합영법이 제정되고, 나아가 1986년 에 김일성의 '2·28 교시'가 발표되자, 조총련계 기업들은 합영사업 형태로 본격적으로 대북 투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28 교시'는 김일성이 평양을 방문한 '재일본 조선인 상공연합회 결성 40주년 기념단'을 접견할 때, "재일동포 상공인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어 일본에서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국과 합작해야 합니다. 총련 동포 상공인은 노동력을 가진 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이 있는 자는 돈을 대고,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발휘, 조국의 인민과의 합영, 합작을 힘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총련 동포 상공인이 조국의 경제발전과

43) 합영회사 소득세법, 외국인 소득세법, 합영법시행세칙은 1985년 3월이 되어 서야 겨우 정비되었다.

44) 조총련은 조국경제건설에 대한 공헌, 김일성 주석 생일기념 축하사업, 북한 건국기념사업, 조총련 결성 기념사업 등의 명분아래 재일 상공인들의 모금 운동을 추진하였고, 그렇게 조성된 자본으로 공장을 설립한 뒤 '애국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기증하였다.

인민 생활향상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입니다”라고 강령적으로 교시한 것을 의미한다⁴⁵⁾. 즉 ‘2·28 교시’는 재일교포들에게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국심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교시로서 ‘조·조 합영사업의 강령’인 것이다.

이와같은 ‘2·28 교시’를 통하여 김일성이 합영사업을 독려함에 따라 조총련은 합영사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아울러 조총련계 상공인·기업인들도 ‘조국에 대한 충성’ 이상의 차원에서 합영사업을 통한 대북한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1987년부터 약 3년간 조총련계 상공인·기업인들사이에서는 ‘합영사업을 통한 대북한 투자 붐’이 일어났다.

그렇게 조총련계 기업들이 합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조총련과의 조직적 관계에 따른 권유·강제·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아울러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투자차원에서만도 아니었다. 그 이상의 차원에서 고려되어 지는 것이다. 즉 참여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⁴⁶⁾.

첫째, 재일 조총련계 상공인·기업인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일본사회에서 차별에 따른 어려운 여건아래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그룹(minority)이고, 주로 ‘불고기 집’이나 ‘파짱코’ 등의 업종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북한과의 합작을 통한 기업경영을 새로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즉 그들은 조·조 합영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명실공히 기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적 명예없이 오직 돈 벌이만을 추구하는

45) 『朝鮮商工新聞』 1986年 11月 18日.

46) 申志鎬, 앞의 논문; 배정호 “민단의 발전과 후계자 육성방안”, 『북한조사연구』 제2권 1호(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장사꾼’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한 것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재일 조총련계 교포들은 민족교육 등의 영향으로 민단계 교포들보다 민족의식이 강하며 ‘조국지향적’이다. 따라서 조총련계 상공인·기업인들은 합영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면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졌었다. 즉 ‘조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애국적 발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면도 있는 것이다.

셋째, 비교적 민족의식이 강했던 재일 조총련계 교포사회도 일본 사회의 변화속에서 1,2세에서 3,4세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족의식이 점차 약해지는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약해지고 있는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배려에서 ‘조국과의 합영사업’에 참여하는 측면도 있다. 즉 사쿠라 그룹의 故 全鎭植 前사장의 표현처럼 북한과의 합영사업은 ‘在日の糧’이었다⁴⁷⁾. 재일교포 1,2세들은 조·조 합영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북한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재일교포 3,4세들의 일본동화를 막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조 합영사업이 전개되면서, 북한과 조총련·일본간에는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정비가 이루어 졌는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⁴⁸⁾.

첫째, 조·조 합영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1986년 6월부터 추진조직이 정비되었다. 즉 동년 6월에 조총련 측 ‘재일조선인’측 조직으로서 「합영사업연구회」가 오사카(大阪)에서 발족되었고, 동년 8월에는 「합영사업연구회」와 북한의 「합영사업준비위원회」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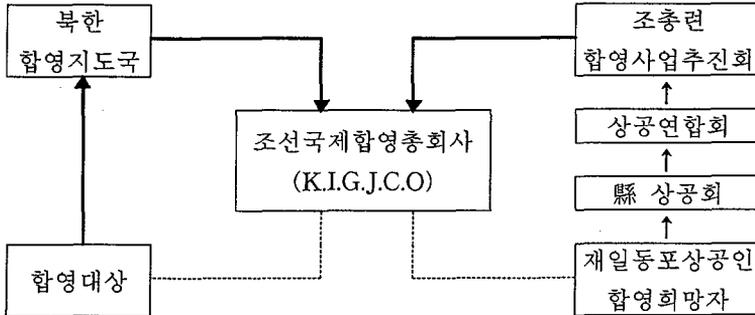
47) 全鎭植, “祖國との合弁は在日の糧,” 「世界」 1994年 10月號.

48) 申志鎬 앞의 논문 ;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開」 (東京 : 日本貿易振興會, 1992年 10月) 등 참조.

조·조 합영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인 「조선국제합영총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역할은 ① ‘조·조 경제합작 및 합영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여 촉진시키는 것이고, ② 합영기업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즉 시장조사, 판로 확대, 자재공급, 수송조직, 재정거래, 기업운영 등을 지도하며, ③ ‘국가적 의의를 지닌 합영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합영기업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었다⁴⁹⁾. 그리고 1987년 4월 「합영사업연구회」는 제2차 이사회에서 명칭을 「합영사업추진회」로 개칭한 뒤, 同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아울러 조총련 중앙회와 상공인연합회의 지도아래 합작사업 추진을 위한 창구를 일본 각 縣의 조총련 본부와 상공회에 마련하였다. 요컨대 양측은 조·조 합영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한 것이다.

49) 「朝鮮商工新聞」, 1986年 11月 4日 ; 「朝鮮商工新聞」, 1986年 11月 18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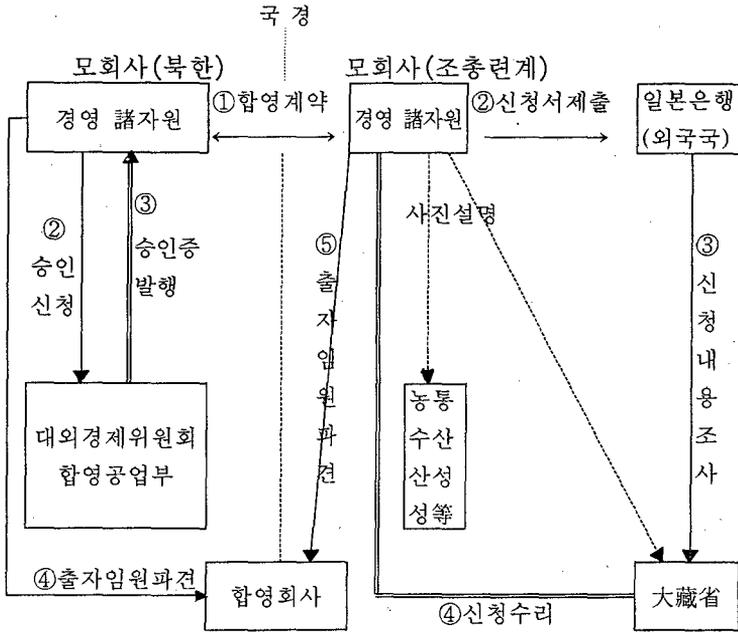
<그림 2>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역할



<출처> 「朝鮮商工新聞」 1998年 3月 1日

둘째, 조·조 합영사업의 전개와 더불어 합영회사의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은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1)조총련계 모회사와 북한의 모회사간의 합영계약, (2) 북한내 대외경제위원회의 합작공업부에 신청, 일본내 大藏省·通産省·農林省 등 관련부서에 사전설명과 더불어 日本銀行(외국국)에 신청서 제출, (3) 대외경제위원회의 승인, 日本銀行(외국국) 및 大藏省의 내용심사, (4) 大藏省의 신청수리, 북한의 모기업과 조총련계 기업의 합작회사 설립과 출자임원 파견 등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림 3> 합영회사 설립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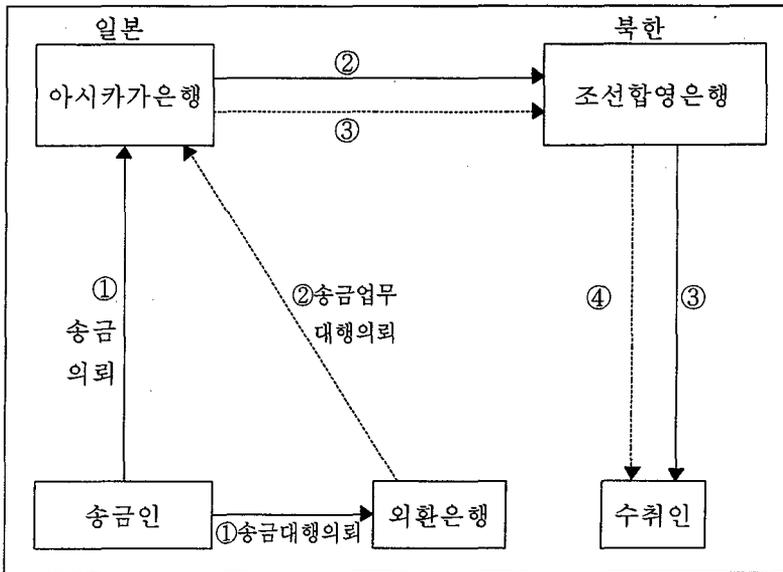


<출처> 「朝鮮商工新聞」 1989年 7月 11日

셋째, 조총련의 합영사업추진회는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함께 조·조 합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5대 5 출자비율'(자본금 20억円, 그 가운데 불입자본금은 6억円)로 「조선합영은행」을 설립했다. 그 설립의 이유는 북한에서 합작회사를 추진과정에서 투자자금관리, 현지 자금조달선의 관리, 내외결제망의 확충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금융과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선합영은행」의 설립에 따른 금융관계 투자환경의 정비는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합영은행

은 대외 콜레스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방은행인 아시카가(足利)은행, 홍콩의 南洋商業銀行, 중국은행의 런던지점 등과 콜레스(은행간 송금)계약을 맺고, 1989년 9월 1일부터 해외송금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아시카가 은행은 <그림 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조총련의 대북 친족 송금, 수입대금, 합작투자금, 해외예금 등 대부분의 외환업무를 대행하였고, 아울러 일본 국내의 모든 외국환 은행들로 하여금 아시카가 은행을 경유하여 조선합영은행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아시카가 은행에서 조선합영은행으로의 송금



<출처> 「朝鮮商工新聞」 1989年 9月 26日

이상과 같은 조직정비와 더불어 조·조 합영사업은 1987년부터 '대북한 투자 붐'을 일으키면서 매년 20여건의 양적 발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북·일관계가 1992년의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하여 냉각되고, '대북 투자심리' 또한 위축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열악한 북한의 투자환경으로 인하여 조·조 합영사업들의 조업중단 사태 및 도산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1995년 1월 20일 「조총련 합영사업추진위원회」는 조·조 합영사업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합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사례중심으로 지적한 “합영회사 운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평양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앞으로 보냈고, 마침내 1996년 10월초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제9차 이사회에서는 조·조 합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⁵⁰⁾.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한 운영상의 문제는 조총련과 협의하고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둘째, 생산된 제품은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셋째, 합영회사 및 공장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노임은 국가규정을 고려하되 해당기업의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넷째, 일본 기술자의 북한 체류기간이나 북한 기능공의 일본 연수기간을 연장시킨다.

2.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

조·조 합영사업은 대체로 비교적 규모가 적고 자금회수가 빠르며

50) 「조선일보」 1996.12.1

저급기술로 가능한 2차산업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조·조 합영사업이 조총련 기업의 자본, 기술적 우위와 북한측의 저임금 노동력, 토지 등이 결합한 상호보완적 사업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투자를 장려하는 철강, 전기, 중화학 공업 등의 기간 사업에는 거의 합영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조·조 합영사업은 조총련계 기업의 자본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기대만큼 발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에 관한 정확한 파악은 정보량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북한의 '합영법'이 제정된 1984년부터 95년까지 설립된 조총련 계열의 합영회사 수(數)는 약 131개이고, 1998년 12월말 시점에 정상적으로 조업중인 합영회사는 '조선합영은행', '모란봉 합영회사', '김만유 병원' 등 15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조·조 합영사업이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거의 실패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1996년 7월 일본을 방문하였던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조 합영사업의 실패를 시인하였고, 또 이듬해 1월 25일 방일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김정기 부위원장은 일본기업들에게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 본격적으로 경제교류를 한 것이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아 준비나 이해가 부족하니 이점을 이해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투자환경속에서 몇몇 합영사업은 상대적이지만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① 먼저 대표적인 조·조 합영회사의 실태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나아가 ② 부진요인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같은 분석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21世紀 政策研究所」, 「아시아 經濟研究所」, 「日本貿易振興會」, 「東아시아 貿易研究會」, 「環日本經濟研

究所」 등의 북한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가. 조·조 합영사업의 대표적인 사례 연구

조·조 합영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사례는 북한과 조총련계 기업간의 합영으로 설립·운영된 사업 가운데, 상당한 기대와 주목을 받았고 한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조·조 합영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었던 경우를 선정하였다. 실제로 그와 같이 유명한 합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의 절대부족에 의한 한계성'도 있다. 즉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운산광산개발이사회」, 「국제화학합영회사 함흥공장」,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 「모란봉 합영회사」 등은 조·조합영에 의해 설립·운영된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1) 「운산광산개발이사회」

재일 조총련계 상공인 50명이 1985년 9월에 출자하여 설립한 「운산광산개발」(자본금 1억 2,000억円)은 동년 11월 북한과 함께 합영회사 「운산광산 개발 이사회」를 설립하였다. 북한 유수의 금광인 운산광산은 금광량(金鑛量)이 약 1,000t(시가, 약 2조円)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과 조총련은 이 금광개발사업에 매우 기대를 갖고 시작하였다. 즉 북한으로서는 채굴된 금을 매각하여 대일채무를 상환할 수 있고, 조총련계 기업으로서는 무역대금의 미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조총련은 이 '금광개발 합영사업'을 매우

중시하여 의욕적으로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금광개발 조·조 합영사업은 곧 난항상태에 빠졌고,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국제화학합영회사 함흥공장」

조총련의 「합영사업촉진위원회」 부회장 겸 「야마구치(山口)縣 조선인 상공회」 회장인 여성근(呂成根)은 김일성의 '2.28교시'가 있는 후북한 지하자원에 주목하여 합영사업을 추진할 것을 그의 아들 呂永佰과 상의한 뒤, 「국제트레이딩」(본사 東京, 사장 呂永伯)을 설립하였다. 1988년에 「국제트레이딩」은 북한의 「용약산 무역회사」와 출자금 2,000만 달러(출자비율 일본 50.4%, 북한 49.6%)로 '레아·아스' 고온초전도용 재료를 생산하는 국제합영공장을 함흥에 세울 것을 계약하였다. 이 레아·아스를 생산하는 「국제화학합영회사 함흥공장」의 설립은 1989년 7월에 착수되어 1991년 4월에 완공되었는데, 그 규모는 조·조 합영회사가운데 최대였다.

즉 「국제화학합영회사 함흥공장」은 원광석 처리, 중간원료 정제, 레아·아스의 추출 및 분류까지 일관생산을 하는 공장이었고, 연간 1,000톤의 광석을 처리, 350톤의 레아·아스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평안북도 철산광산의 레아·아스 매장량이 50만톤정도였으므로, 북한과 합영운영시 단순계산으로 500년간은 원료공급에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다. 레아·아스는 하이테크 산업의 필수품이고,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므로 일본으로서도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필요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상당히 밝은 조·조 합영사업분야였다.

따라서 이 공장의 조업식에는 박성철 부주석, 김달현 부총리 등 정부원 관료들, 王力平 중국공산당 상하이(上海)市 위원회 비서장 등이 참석하였고, 조업식행사는 일본의 TV에까지 소개되었다. 이처럼

상당한 기대속에 출범한 이 회사는 초기에는 상당히 성공적인 합영 회사의 사례로 평가되었으나, 1997년경부터 조업중단 또는 가동중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3)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은 조총련계 대학 즉 「조선대학」 출신의 동창생 4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PACO」와 북한의 「조선악기총회사」가 1987년에 합영계약을 체결하여 설립한 고급 피아노 생산공장이다. 이 공장은 1989년 11월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 조업식에는 강희원 부총리를 비롯하여 장철 문화예술부 부장, 김주영 교포사업총국 부장, 김성환 합영공업부 부부장 등이 참석하였고, 아울러 당시 북한 방문중에 있던 「제7차 조총련 합영경제대표단」(단장 전연식)도 참석하였다. 이 공장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화학 합영회사 합흥공장」 함께 조·조 합영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피아노를 생산하는데 거의 일본기술과 일본산 부품(부품의 약 70%가 일본산)을 사용하였지만, 피아노 음의 가장 중요한 향판(響板)은 백두산의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에서 제조된 피아노는 1992년 4월부터 PACO라는 상표를 달고 일본에 수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시장의 최종판매가격은 일본산 피아노보다 10~20%정도 저렴한 편이지만, 품질은 결코 일본산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측 판매는 「亞南柱式會社」가 맡고 있는데, 130인치 피아노 4종류 및 160인치 피아노 1종류가 「亞南柱式會社」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연주표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은 비교적 성공한 합영회사로서 평가되었지만, 일본국내시장에서 전자울진이 보급되면서 더 이상 신장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4) 「모란봉 합영회사」

사쿠라 그룹이 1987년 북한과 합영계약하여 평양에 설립한 「모란봉 합영회사」는 남성용 신사복을 생산하다가 최근에는 잠바도 생산하고 있다. 「모란봉 합영회사」에서 생산된 기성복은 사쿠라그룹을 통하여 일본국내에 판매되었는데, 1992년 가을부터 「大丸 백화점」의 직영 5개의 점포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다. 일본내 평가는 최종시장 가격이 통상 백화점 가격의 50%정도인데 비하여, 품질이 봉제기술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편이었다. 즉 일본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판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이 「모란봉 합영회사」는 가장 성공한 조·조 합영회사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경영권 및 인사권을 북한측이 장악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이 아닌, 주목할 만한 외국기업과의 합영사업 사례도 있다. 비교적 성공한 외국기업과의 합영사업 사례는 북한과 싱가포르 기업간에 합영하여 설립한 나진·선봉지구의 「수산물 가공 합영공장」이 있고, 일본의 기업과 합영하여 설립한 「남포 전자부품 합영공장」이 있다. 「남포 전자부품 합영공장」은 일본제 에어컨에 소요되는 특수코일의 약 40%를 제작·공급하고 있다.

나. 부진 및 실패요인

조·조 합영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부진한 상태에 있거나 실패로 끝나고 있다. 부진 및 실패요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극히 열악한 투자환경에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1) 경제적 요인과 (2) 경제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적 요인

조·조 합영사업의 부진 및 실패의 경제적 주요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원료 및 에너지 공급과 그에 따른 조업중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비에 따른 취약한 생산기반, 노동자의 의욕 상실 등 노동공급 및 관리의 문제점, 경영혁신 및 기술도입에 대한 거부감, 생산품의 취약한 대일 수출경쟁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원료·원자재, 전력·에너지 공급의 불안정

북한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북한측이 예정대로 원자재의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합영공장의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997년 「청천강 합영공장」은 원료인 잠사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자 북한측이 잠사를 공급하지 않고 수출을 해버려, 원료인 잠사공급의 중단으로 한해동안 거의 정상가동을 못하였다. 즉 북한과의 합영공장 운영시에는 무엇보다도 원료 및 원자재의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 전력이 극히 부족하여 조업중인 합영공장의 경우 50%정도만 가동되며, 때때로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조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력소모가 많은 분야는 북한과 합영사업을 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전력소모가 적은 사업분야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하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즉 앞에서 언급한 「모란봉 합영회사」나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의 경우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난을 극복하였다.

② 생산기반의 취약성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극히 미비하여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합영공장을 내지에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고물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우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안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노동공급 및 관리의 문제점

북한측은 중국 등 국제노동시장을 조사한 뒤 합리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法外의 임금을 결정·요구한다. 즉 북한 합영사업 종사자의 임금은 중국보다 높다. 그러나 실제로 합영사업 종사자는 임금중 일부만을 받으므로,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즉 북한의 노동력은 중국에 비해 양질로 평가되지만, 공급 및 관리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생산-고임금'에 의한 생산비용의 증가로 합영사업의 국제경쟁력 즉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④ 수출경쟁력의 취약

조·조 합영회사의 제품들이 일본으로 진출하기에는 경쟁력이 약하다. 즉 제품의 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모란봉 합영회사」의 기성복, 「평양 피아노 공장」의 「PACO」피아노 정도이다. 고급소재로 기대를 모았던 레아·아스도 최대생산국인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

야 하므로, 중국의 레아·아스를 능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일본에서 안정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경영혁신 및 기술도입에 대한 거부감

북한은 「합영회사」에 운영에 적합한 경영혁신을 도모하지 하지 않고, 곧 구체적으로 후술할 「대안의 사업체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우리식 합영사업」을 추구하였다.

또 북한은 합영에 참가한 재일 조총련계 기업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곤 하였다. 예컨대, 「지성아연합영회사」나 「지성금산합영회사」의 경우, 재일 조총련계 기업측에서 제공한 신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하였다. 요컨대, 북한은 경영혁신 및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무지한 것이다.

(2) 경제외적 요인

조·조합영사업의 부진 및 실패의 경제외적 주요 요인으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오해,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및 「우리식 합영사업」의 파행적 운영, 관료들의 부패, 행정서비스의 취약, 북한측의 신용(trust)·계약을 경시하는 경제행위, 북한 비거주에 따른 한계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대한 무시·무시
; 「대안의 사업체계」와 합영사업의 충돌

북한은 1961년 12월에 있었던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도도를 계기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하였는데,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강조하며 기업관리체계에 당의 정치적 지도체계를 투입하고 있다. 즉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른 공장운영에서는 「공장 당위원회」가 정치지도 및 경제관리를 통일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최고기관이며, 따라서 당비서·부비서가 기업활동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와같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합영회사의 운영에 도입한 이유는 (i)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효과적으로 극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ii) 자본주의측의 자본과 기술만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동출자·공동경영’의 합영사업은 ‘공동출자·북한 단독경영’의 합작사업으로 변형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조합영회사에는 최고의사결정기관로서 이사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비공식적 기구인 「공장 당위원회」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변형된 「우리식 합영사업」경영은 상대인 조총련측 기업의 ‘소유권·경영권·인사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는 조·조 합영사업에 심각한 균열 및 갈등을 야기하였다. 즉 「대안의 사업체계」와 합영사업의 충돌은 조·조 합영사업을 실패로 끝나게 한 가장 큰 경제외적 요인중의 하나인 것이다⁵¹⁾.

51) 申志鏞, 앞의 논문.

② 관료들의 부패 및 취약한 행정서비스

북한은 합영사업 관련 관료들의 부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이 중국보다도 더 많이 지출된다고 한다. 즉 중국의 경우는 상납된 뇌물을 관료들이 배분하여 가지지만, 북한의 경우는 상납된 뇌물을 독식하므로 단계별로 뇌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열악한 행정서비스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제일 투자자들은 필요에 따라 북한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종종 입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북한에 있는 합영회사에 가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③ 북한측의 신뢰·계약을 무시한 경제행위 ; 자신들의 이익을 「합영사업」의 이익보다 우선시

북한측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행위에 미숙한 탓에 대외무역에서의 신용의 중요성, 합영에 있어서의 계약의 의미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를 때때로 하였다. 즉 북한측은 대외무역에서의 신용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종종 납기일을 엄수하지 않았고, 또 계약보다 가격을 중시하여 원자재의 해외가격이 높으면 합영공장에 제공할 원료·원자재까지도 해외에 팔아버리는 극히 이기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이는 북한측이 자신의 이익을 조·조 합영사업의 이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④ 북한 비거주에 따른 한계성

조·조 합영회사의 조총련측 이사들은 일본에 거주하므로, 대개 1년에 1-2번정도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측 기업은 경영권 및 인사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경영미숙에 의한 합영사업의 실패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V. 결 론

북·일 경제관계는 1991년부터 북·중교류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을 가지는 교역관계이지만, 일본 재계 및 기업들이 대북한 교역 및 투자에 냉담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체상태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조·조 경제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즉 북·일 경제교류는 조·조 무역, 조·조 합영 및 합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일 경제관계의 한계성인 동시에 특수성이기도 하다.

북·일 경제관계가 그와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은 일본에 조총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다. 국교가 없는 북·일관계에서 조총련은 '주일 북한대표부', '주일 재외경제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일 상공인들에게 조·조 경제교류에 참가하도록 권유·종용·강제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조총련계 기업들은 이러한 조총련의 영향아래 1967년부터 '애국공장' 형태로 대북한 투자를 하였고, 1984년 '합영법'의 제정과 더불어 합영사업을 통한 대북한 직접투자를 추구하였으며, 아울러 1986년의 「2·28교사」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합영사업에 참가하였다. 1987년부터 약 3년간 조총련계 상공인·기업인들사이에서는 '합영사업을 통한 대북한 투자 붐'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조총련계 기업들의 합영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조총련과의 조직적 관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조·조합영은 在日의 糧'이라는 차원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조 합영사업은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거의 실패하였고, 몇몇 성공적인 분야도 부진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조·조 합영사업의 부진 및 실패의 (1) 경제적 주요 요인으로는 원료 및 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과 그에 따른 조업중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비에

따른 취약한 생산기반, 노동자의 의욕상실 등 노동공급 및 관리의 문제점, 생산품의 취약한 대일 수출경쟁력, 경영혁신 및 기술도입에 대한 거부감 등을 지적할 수 있고, (2) 경제외적 주요 요인으로는 시장 경제에 대한 무지·오해,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및 「우리식 합영사업」의 파행적 운영, 관료들의 부패, 행정서비스의 취약, 북한측의 신용·계약을 무시한 경제행위, 북한 비거주에 따른 한계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조 합영사업의 부진 및 실패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곧 북한 투자환경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이므로, ‘북한측의 투자환경 개선방안’ 마련이나 ‘우리기업들의 대북한 진출 전략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다음과 같은 교훈이나 전략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북한은 자본주의적 경영에 미숙하므로, 반드시 경영권과 인사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과 주요 기술자들이 현지 상주하여야 한다. 비자조차 제때에 발급되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고려해 볼 때, 경영진과 주요 기술자들이 반드시 현지에 상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열악한 행정서비스, 계약이행의 경시 등을 고려해 볼 때, 권력적 보호막을 염두에 둔 ‘배후 파트너’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차원의 회사들과 합영을 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중앙차원의 공적 창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로, 철도 등 SOC시설이 미비하고, 원료·원자재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대북한 투자사업은 가능한 한 임가공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수송문제 등을 고려하여 연안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진·선봉 지구의 합영공장에는 「공장 당위원회」가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연안지역의 경제특구화와 더불어 임가공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연안개

발 투자전략'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전력·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으로 조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북한 투자사업으로서는 전력소모가 적은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가발전기로 전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가 적절한 것이다.

다섯째,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및 「우리식 합영사업」의 과행적 운영 때문에 「대안의 사업체계」와 합영사업이 충돌하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합영에 관한 계약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철저하게 문서화해야 할 것이다. 즉 합영법, 외국인 투자법의 내용대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시 이를 문건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준비로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합영에 관한 법규정을 철저하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서진영외. 「효율적인 대북투자」. 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7.
- 오승렬.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6.
- 이도형. 「북한의 전위조직 조총련의 실체」.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 임강택. 「북한의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의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제성호. 「대북투자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3.
-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在日本 大韓民國 民團 中央本部 編著. 「북한·조총련」. 서울: 오름, 1996.
- 중앙정보부. 「朝總聯」. 서울: 중앙정보부, 1975.
-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통일연구원.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7.
- 度邊利夫. 「北朝鮮の現状を読む」.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7.
- 武貞秀土. 「北朝鮮深層分析」. 東京: KKベストセラーズ, 1998.
- 世界經濟情報サービス. 「北朝鮮 : 經濟,貿易の動向と見通し」. ARCレポート, 東京: 世界經濟情報サービス, 1987.
- 李瑜煥. 「在日韓國人 60萬」. 東京: 洋洋社, 1971.

2. 논문

- 김도형. “일본의 대북한 경제정책.” 『美蘇研究』. 제7집, 서울: 단국대학교 美蘇研究所, 1994.
- 배정호.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통일연구원, 1996.
- 배정호, “민단의 발전과 후계자 육성방안.” 『북한조사연구』. 제2권 1호, 통일정책연구소, 1998
- 이승목. “조총련이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총련의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1978.
-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について.”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2. 10.
- 申志鎬. “北朝鮮の經濟特區.” 『法學政治學論叢』. 第三十六號, 東京: 慶應義塾大學, 1986.
- 玉城素. “日本の對北朝鮮經濟協力.”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1. 12.
- 玉城素. “北朝鮮の合弁事業と經濟特區.”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2. 12.
- 田中喜與彦. “日朝經濟關係.”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3. 12.
- 田中喜與彦. “日朝經濟關係.”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5. 3.
- 田中喜與彦. “日朝經濟關係の現狀と展望.”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日本貿易振興會, 1996. 12.
- 全鎮植. “祖國との合弁は在日の糧.” 『世界』. 1994年 10月號.

3. 기타

「朝鮮商工新聞」.

「조선중앙년감」(각년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各年度).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現況」(各年度). 東京: 財團法人 ラジオプレス.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채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5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6,0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발간예정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운	저	발간예정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	외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	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채성호의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59, FAX:901-2547)

